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 및 부서별 시정 업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행정의 문제를 적발·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 수행

2. 감사기간 및 장소

- 기 간: 2025. 6. 12. ~ 6. 19.(8일간)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및 감사 대상기관 또는 사업장 현지

3. 감사대상 기관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 33개 부서
 - 분 청 : 2담당관, 20과(22개 부서)
 - 사 업 소 : 3사업소(3개 부서)
 - 동 : 7동(7개 부서)
 - 지방공기업 : 1공사

4. 감사대상 사무

- 2024. 5. 1. ~ 2025. 4. 30.까지 처리된 사무(단, 필요시 추가요구)
- 불 입 :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무

5. 감사위원회 편성

- 감사위원 : 8명(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전원)
- 감사보조 : 4명
 - 전문위원 박영훈, 행정7급 서혜인, 김동현
 - 속기사 배은주

6.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

◦ 감사방법

- 수감기관의 소관사무 전반에 대한 자료요구, 업무현황 청취, 시책질의 및 답변, 문서 확인 방법 등으로 실시
- 필요시에는 현지 확인 병행 실시

◦ 감사 진행 순서

-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선서서식 - 별지)
- 피감사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질의·답변 및 문서 확인
- 현지 확인 또는 참고인 출석 증언(필요시)
- 감사결과 강평
- 감사종결 선언

◦ 기타사항

- 감사일정 변경, 증인추가 선정, 추가자료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음.

7.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작성방법

-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 사전배부(별지)
- 감사대상 기관별 감사종료 직후 위원들은 감사결과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취합하여 감사일정 종료 후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
- 피감사기관의 장은 수감내용을 감사종료 3일 이내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 (감사개요, 감사위원별 지적내용과 답변내용, 조치계획 등)

◦ 감사결과 처리의견

- 시정요구사항(잘못된 점 등에 대해 시정이 필요한 사항)
- 처리(개선)요구사항(시정은 아니더라도 불합리하여 해당기관이 처리해야할 사항)
- 건의(권고)사항(건의할 사항이나 희망사항)

※ 주요근거 서류(감사결과 증빙서류 - 별도 서면제출)

8. 감사일정

기 간	대 상	수 감 내 용	출석요구증인
6. 12.(목) 10:30 [8개 부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미래도시전략과 ·세정과 ·징수과 ·정보통신과	·감사실시선언 및 위원장인사 ·증인 선서 ·서류검증 및 의견진술청취	선서 및 감사 부시장 해당 담당관 기획조정실장 해당 과장
6. 13.(금) 10:00 [4개 부서]	·인구청년과 ·아이돌봄과 ·교육청소년과 ·가족정책과	·감사실시선언 ·증인 선서 ·서류검증 및 의견진술청취	선서 및 감사 미래교육돌봄국장 해당 과장
6. 16.(월) 10:00 [6개 부서]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회계과 ·공공시설과 ·민원봉사과 ·서울사무소	·감사실시선언 · 증인 선서 · 서류검증 및 의견진술청취	선서 및 감사 행정안전국장 해당 과장, 소장
6. 17.(화) 10:00 [4개 부서]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생활안정과	·감사실시선언 ·증인 선서 ·서류검증 및 의견진술청취	선서 및 감사 사회복지국장 해당 과장
6. 18.(수) 10:00 [11개 부서]	·평생학습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동 소관(7) ·구미도시공사	·감사실시선언 ·증인선서 ·서류검증 및 의견진술청취	선서 및 감사 해당 원장, 관장, 동장 구미도시공사장, 본부장, 해당팀장
6. 19.(목)	【최종정리】	·감사결과 보고서 최종 종합 정리	

9. 감사실시 결과

◦ 총 평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구미도시공사 등 33개 부서를 대상으로 총 1,092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 6. 12. ~ 6. 19.까지 8일간 집행기관 각 부서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상태로 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검증과 질의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26건(시정 70, 개선 70, 권고 86)의 지적사항을 이끌어 내었음.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 기획행정위원회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청취한 불편사항과 이슈가 되는 주요 사업에 중점을 두고 깊이 있는 감사활동을 추진하여 시민권의 증진 방안과 행정 집행 방식에 대해 효율적 방향을 제시하였고 의회의 고유권한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음.
-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 집행에 대한 효율성과 합목적성·성실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의 변화와 발전의 기회로 삼도록 집행부의 세밀한 계획과 성실한 집행을 당부함.
- 특히, 정책제안 채택 여부에 대해 제안자에게 충분하고 성의 있는 설명과 안내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허위 또는 오류 기재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 체계 제도화와 실효성 있는 결산 성과평가를 위해 각 부서에 현실성 있는 목표 설정을 주문하였음.
- 위원들이 평소 의정활동 중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 및 숙지하여 업무 추진 시 문제의 재발 및 행정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필요함.

▷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 감사·홍보 분야는

- 공직유관단체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채용 관련 업무가 일관되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채용 기준과 절차를 수립·정비해야 하며,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조직 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음.
- 아시아육상경기장 관련 시설에서 다수의 하자 발생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부실공사 방지 대책이 단순한 지도·점검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감사담당관 차원에서 공사 전반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향후 유사 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의 점검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음.
- 일부 지역축제 등 지역적이고 단편적인 행사 중심의 홍보보다 관내 다양한 관광지와 명소 발굴을 통한 지역 관광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특색있는 도시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음.
- 또한 구미시의 대외 이미지 개선과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공식 유튜브 채널 등 디지털 플랫폼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하여 긍정적인 시정 이미지를 구축할 것을 당부하였음.

□ 기획 분야는

- 성과지표 고도화 컨설팅 용역과 관련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에야 용역이 시행되는 등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도구인 성과지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태도 개선을 요구하였음.
- 결산서 상 성과평가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평가된 사례 등을 통해 성과 목표가 지나치게 안일하게 설정되었거나 지표의 현실성이 부족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성과목표 설정 기준을 엄격히 하고, 결과 평가 시 집행률 등 실적 지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음.
- 신공항 연계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실행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하거나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음.
- 정책제안 공모에서 제안이 불채택된 경우 기 시행 중인 유사 사업의 존재, 현실적 제약 등으로 인한 미추진 등 그 사유를 명확히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제안자에 대한 피드백 체계 강화를 통해 정책 참여에 대한 신뢰 및 제안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요구하였음.

□ 미래교육돌봄 분야는

- 관내 면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실정을 반영한 별도의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현황 조사·분석과 이에 따른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음.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구미시는 상위법 및 관련 지침만을 근거로 운영 중이며 별도의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의 명확성과 제도적 정비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주문하였음.
- 교과 연구활동 예산 관련하여 지자체는 보조적 역할에 그치는 것이 타당하고, 교육청에서 주관해야 함에 따라 해당 예산을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등 보다 시급하고 실효성 있는 분야로 전환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방안 검토를 당부하였음.
-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관련 조례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교육경비 보조사업 외에도 다양한 보조사업을 균형 있게 운영하여 시정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음.

□ 행정·안전 분야는

- 2024년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력히 촉구하였듯 현재 구미시 내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행사를 효과적으로 통합·운영하여 구미시민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는 ‘구미시민의 날’을 조속한 제정을 주문하였음.
-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반드시 개최하여야 하나, 최근 3년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서에서 통합방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되어 통합방위에 대한 책임 의식 강화를 통해 지역 안전과 시민 보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요구하였음.
- 새마을과에서는 매년 유사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새마을과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에 기반한 예산 편성을 통해 능동적 행정 추진을 요구하였음.
- 청사환경 개선사업비를 조성공사와 도로파손 정비공사 등 세부사업을 통합해 포괄 편성·집행함으로써 의회의 명확한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은 절차상 문제임을 지적하여 각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명확히 분리 편성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카페 조성 후 발생한 폐기물 방치 문제에 대해 철저한 현장 관리 및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음.

□ 사회·복지 분야는

-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포함되기 부적절한 사업들이 일부 존재하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수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당부하였음.
- 구미시 추모공원이 2015년 의회 동의를 통해 5년간 위탁 운영이 승인된 이후, 재위탁 동의 절차 없이 사업이 지속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구미추모공원 관리운영 위탁에 대하여 의회 동의 절차를 준수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주체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였음.
- 휠체어 수리 관련 서류를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하고, 명확한 수리 의뢰서 및 청구서류 양식을 마련하여 수리센터의 과도한 수리 및 예산 요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하였음.
- 현재 청소년 교복비 지원사업이 교육청소년과의 보편지원사업과 유사하게 이중 운영되고 있어 행정 비효율 개선과 사업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한 부서에서 예산을 총괄 편성하고,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과 관련 조례의 폐지 검토를 요구하였음.

□ 평생교육 · 동 행정복지센터 · 구미도시공사 분야는

- 평생학습원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정보 전달이 불충분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구성 및 정책 홍보방식 정비를 당부하였음.
-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이 반복되어 시의 직접적인 관리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입찰 단계부터 공동이행방식 등을 통해 시에서 직접 계약·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주문하였음.
-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주차장이 대형차량 장기주차 등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해 주차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담당 부서의 책임감 있는 조치를 요구하였음.
- 수의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의 계약 내역을 구미도시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지적사항 건수

부 서 별 (직제순)	지 적 건 수				비 고
	총 건수	시 정	개 선	권 고	
합 계	226	70	70	86	
감 사 담 당 관	10	2	6	2	
홍 보 담 당 관	10	0	4	6	
정 책 기 획 과	7	3	2	2	
예 산 재 정 과	11	4	4	3	
미 래 도 시 전 략 과	4	0	1	3	
세 정 과	3	0	1	2	
징 수 과	2	0	1	1	
정 보 통 신 과	1	0	0	1	
인 구 청 년 과	12	2	3	7	
아 이 돌 보 과	10	3	3	4	
교 육 청 소 년 과	22	7	7	8	
가 족 정 책 과	6	0	2	4	
총 무 과	21	11	4	6	
안 전 재 난 과	15	11	2	2	
새 마 을 과	7	1	0	6	
회 계 과	9	4	1	4	
공 공 시 설 과	1	0	0	1	
민 원 봉 사 과	2	0	1	1	
복 지 정 책 과	6	0	4	2	
어 르 신 복 지 과	19	5	10	4	
장 애 인 복 지 과	6	0	5	1	
생 활 안 정 과	2	0	2	0	
평 생 학 습 원	9	4	2	3	
서 울 사 무 소	0	0	0	0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4	1	0	3	
동 행 정 복 지 센 터	3	0	0	3	
구 미 도 시 공 사	19	9	4	6	
전 부 서	5	3	1	1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감사담당관	권 고	<p>1. 민원발생 시 감사담당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 회장 수당 관련, 민원인이 감사담당관을 방문하였으나, 소관 부서로 단순히 연계하는 수준에 그치고 감사담당관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조치나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음. ○ 추후 소관 부서의 대응과는 별도로, 민원의 성격에 따라 감사담당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등 능동적인 역할 수행이 요구됨.
감사담당관	개 선	<p>2. 정기·수시감사 병행을 통한 효율적 감사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종합감사 시, 동일한 지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업무담당자 대상 교육의 부족과 더불어 감사가 3년 주기로 정기적으로만 이루어진 데 따른 문제로 판단됨. ○ 정기감사 외에도 수시감사를 병행하여, 사전 예방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감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감사담당관	개 선	<p>3. 감사결과 구분 세분화를 통한 감사 효율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감사 결과에 대한 개선을 위해 미숙, 태만, 부패, 업무과다 등 감사 처분 구분을 세분화하고, 이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결하여 감사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감사담당관	개 선	<p>4. 「부패방지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한 청렴도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미시는 최근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은 바 있으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이에 따라, 「부패방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조직 내 반부패 체계를 명확히 하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실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감사담당관	개 선	<p>5. 감사담당관 임명 시 외부 전문가 공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내부 인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를 공개모집을 통해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외부 공모를 통해 다양한 감사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함으로써, 조직 내 감시 기능 강화 및 투명한 행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감사담당관	시 정	<p>6. 직원 채용 실태 점검 및 체계적인 제도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준수하여 직원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조직 내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채용 관련 업무가 일관되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채용 기준과 절차를 수립·정비해야 하며,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여야 함.
감사담당관	시 정	<p>7. 부실공사 방지대책 철저 및 감사담당관 차원의 재발방지 방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육상경기장 관련 시설에서 다수의 하자 발생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함. ○ 단순한 지도·점검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감사담당관 차원에서 공사 전반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의 점검 체계 강화가 요구됨.
감사담당관	권 고	<p>8.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들이 시정 전반에 대해 겪는 고충,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처리받을 수 있는 창구 마련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감사담당관	개 선	<p>9. 장기 미개정 조례에 대한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이후 장기간 개정되지 않은 조례의 경우, 현행 법령이나 행정 환경과의 불일치로 인해 행정 집행의 실효성을 저해하거나 주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제·개정 후 장기간 변화가 없는 조례를 전수 점검하고, 시대적 변화와 행정 수요를 반영한 조례 정비 작업이 시급히 필요함.
감사담당관	개 선	<p>10. 청렴도 평가결과에 따른 세부지표별 개선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보고서에서 드러난 취약 분야를 면밀히 분석하고,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점검 및 환류 체계 강화를 통해 청렴 수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홍보담당관	개 선	11. 공식 유튜브 채널의 획기적·적극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미시의 대외 이미지 개선과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공식 유튜브 채널 등 디지털 플랫폼을 보다 획기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구미시의 다양한 정책, 행사, 문화, 관광자원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하여 긍정적인 시청 이미지를 구축하여야 함.
홍보담당관	권 고	12. 'YES 구미' 슬로건의 지속 사용 여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ES 구미' 슬로건은 오랜 기간 사용되어 시민에게 익숙하고 인지도가 높으나, 변화하는 도시 이미지와 미래지향적 비전을 반영하는 데 적합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슬로건의 지속 사용에 따른 홍보 효과와 브랜드 연속성, 또는 변경 시 기대되는 이미지 쇄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슬로건 유지 또는 개편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홍보담당관	개 선	13. 기업 MOU 관련 변동사항 발생 시 정정보도 통한 책임행정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과의 MOU 체결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외적으로 내용을 알린 경우, 추진 과정에서 일정·조건·내용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한 정정보도 및 후속 안내가 필요함. ○ 이는 시민과 투자자, 언론 등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치이며, ○ 향후에도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투명한 대외 소통 체계 확립을 위해 정정보도 절차를 명확히 마련해야 함.
홍보담당관	권 고	14. 비판 기사에 대한 균형 있는 대응과 홍보비 집행 원칙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못된 비판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부당한 기사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나, 수용할 만한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함. ○ 건강한 비판 기사가 존재할 때 올바르게 투명한 시청 운영이 가능하며, 시청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홍보비 집행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홍보담당관	권 고	15. 홍보 관련 업체 선정 기준 마련 및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소식지 제작은 관내 특정 업체가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반면, 홍보영상 제작은 주로 관외 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업체 선정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며, 관내 다양한 지역업체에도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분배 방안 마련이 요구됨.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홍보담당관	권 고	16. 구미시 홍보 이미지 및 도시 브랜드 마케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미시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경쟁력 있는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도시 이미지와 브랜드 홍보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그러나 현재는 일부 지역 축제 등 지역적이고 단편적인 행사 중심의 홍보에 치우쳐 있어, 보다 폭넓고 전략적인 홍보 방향 설정이 요구됨. ○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 및 숨겨진 명소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 관광 자원의 다양성과 볼거리를 확장해야 함. ○ 이를 통해 관광객 유치 기반을 넓히고, 구미시 전체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굴된 신규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홍보 전략 수립 및 실행이 필요함.
홍보담당관	권 고	17. 위원회 공개모집 활성화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시민의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위원회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시민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홍보담당관	권 고	18. 국민제안 제도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제안이 채택될 경우 포상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제도임에도, 관련 정보에 대한 시민 홍보가 부족함. ○ 이에 따라 국민제안 채택 사례 및 포상제도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홍보담당관	개 선	19. 자치법규 정비 및 지속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법규의 정비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신속한 연계 조치, 불필요한 조례의 폐지, 조문 현행화 등을 적기적소에 추진해야 함. ○ 정기적인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 수립과 함께, 각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자치입법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비 체계 구축이 요구됨.
홍보담당관	개 선	20.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인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내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보상은 공직사회 전반에 긍정적 동기부여로 작용함. ○ 우수공무원 선발 인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직급과 분야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정책기획과	권 고	<p>21. 위원회 전면 정비 및 중추적 역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중에는 기능상 없거나 매우 저조한 경우가 존재함. ○ 정책기획과는 시정 전반의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집중 발굴·정비하는 중추적 역할 수행이 필요함. ○ 실효성 없는 위원회는 통합·폐지하고, 기능유지가 필요한 위원회는 정기적 개체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 및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정책기획과	권 고	<p>22. 천생산 힐링단지 조성 사업의 조속한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선 8기 시장 공약사항 중 하나인 천생산 힐링단지 조성 사업의 행정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인.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관련 부서간 협업 강화 및 행정절차의 신속한 추진이 요구됨.
정책기획과	시 정	<p>23. 성과지표 고도화 적극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 고도화 컨설팅 용역과 관련하여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에야 용역이 시행되는 등 ○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고, 성과지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성과지표는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도구인 만큼, 관련 부서의 태도 개선과 시정 조치를 요구함.
정책기획과	시 정	<p>24. 「구미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 및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청원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기본권으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미시 차원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이 필요함. ○ 현재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해 청원 심사와 처리 절차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행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민 권리 보호 측면에서도 제도적 미흡이 우려됨. ○ 이에 따라, 「구미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조속히 제정하여 시민의 권리 보호 및 청원의 공정한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것을 요구함.
정책기획과	개 선	<p>25. 시정조정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촉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필요 시 위촉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현재 시정조정위원회는 전원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시정 전반의 계획 수립과 주요정책 수립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성과 다양성이 부족한 실정임. ○ 주요 시책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함.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정책기획과	개 선	<p>26. 산단도시 구미시 정체성에 부합하는 정책기획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기업의 산업적 특성과 산단도시로서의 구미시 정체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 수립이 중요하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전략적 기획 기능 강화와 실행력 있는 지원 체계 구축이 요구됨. ○ 정책기획 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기업 수요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조정·조율하고,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주도할 필요가 있음.
정책기획과	시 정	<p>27. 「구미시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존치 타당성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폐지로 제정 근거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은 여전히 존치되고 있음. 상위법 근거가 소멸된 규정은 행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관련 규정의 폐지 또는 정비가 필요하며, 집행부는 이에 대한 검토와 후속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함.
예산재정과	개 선	<p>28. 2025년 행안부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계획 숙지 및 반영을 통한 운영 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의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계획을 충분히 숙지하고, 효율성 항목 반영, e호조를 통한 자료 제출 방식, 청년 참여 확대, 일반 주민 대상 교육 실시, 생활안전제안사업 비중 등 주요 평가 기준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절차적 기반 마련이 요구됨.
예산재정과	시 정	<p>29. 예산 집행 효율성 및 계획수립 정확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집행 시 집행잔액이 일정 비율 이상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저하 및 계획 부실이 우려됨. ○ 이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 대한 인사 페널티 등 책임성 강화 조치를 도입하여, 부서별 월별 집행계획에 따른 예산 집행을 철저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예산재정과	시 정	<p>30. 재정 건전성 강화 및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구미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예산 배정 계획 수립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부서별·월별 재정 집행 계획에 따른 집행 결과의 적정 이행을 촉구함.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예산재정과	권 고	<p>31. 예산절감 우수사례 발간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에서는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발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구미시는 아직까지 해당 조례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예산절감 우수사례 발간은 예산 효율성 제고 및 행정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적극적인 우수사례 발굴 및 발간이 요구됨.
예산재정과	시 정	<p>32. 역점 추진 과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일자리 창출 예산 확대 독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구미시의 일자리 창출 예산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예산 편성 및 정책 추진 시 일자리 창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부서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
예산재정과	개 선	<p>33. 부서별·읍면동별 예산수립 정확도 성과평가 지표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성과평가 지표 선정 시 부서별·읍면동별 세입·세출 예산수립 정확도를 포함하여 예산 운영의 체계성과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신중한 검토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예산재정과	권 고	<p>34. 동일 사업 예산의 반복 상정 행위 지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미 삭감된 사업이 추경 예산안에 다시 상정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 동일 사업의 반복 상정 행위는 지양되어야 하며, 예산 편성의 사전 기획과 의회 심의 결과에 대한 존중과 책임 있는 예산 운영이 필요함.
예산재정과	시 정	<p>35. 결산 성과평가의 실효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서 상 성과평가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성과 목표가 지나치게 안일하게 설정되었거나 지표의 현실성이 부족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평가된 사례는,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 자체의 신뢰도를 저해함. ○ 성과목표 설정 기준을 엄격히 하고, 결과 평가 시 집행률 등 실적 지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예산재정과	개 선	<p>36. 주민참여예산 사업 간 예산편성의 형평성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예산이 일부 사업에 예산이 과도하게 편중되거나, 유사한 중요도의 사업 간 편성 규모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주민 간 갈등 및 제도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 따라서, 주민참여예산 편성 시 지역 간, 사업 유형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고려한 배분 기준 마련이 필요함.
예산재정과	개 선	<p>37.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서면회의로 대체하거나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의 방만한 운영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심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예산재정과	권 고	<p>38. 경로당 보수 자부담에 대한 행정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 보수 사업 추진 시 이용 어르신들에게 자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고령층의 복지 증진이라는 경로당 운영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자부담 기준 및 적용 방식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
미래도시전략과	권 고	<p>39.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형평성 있는 경관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경관사업 추진 시, 각 지역의 고유한 자연·문화·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균형 있는 경관사업 추진과 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향후 경관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배분 시, 지역별 특성과 수요 분석을 토대로 공정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미래도시전략과	권 고	<p>40. 산동읍 명칭 표기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동읍이 면에서 읍으로 승격되었으나, 여전히 도로 이정표나 안내판 등 다수의 공공표지에 과거 행정구역 명칭인 '산동면'으로 표기된 사례가 존재함. ○ 이는 지역 정체성과 행정 신뢰도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공항 배후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세부적인 생활 기반시설 및 공공안내 체계까지 철저히 정비할 것을 권고함.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미래도시전략과	권 고	<p>41. 신공항 연계 정책 추진 시 실현 가능성에 따른 명확한 사업 구분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공항 건설에 대비한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경우,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우려됨. ○ 따라서,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실행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하거나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미래도시전략과	개 선	<p>42.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정비 및 기본계획 수립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나, 현행 조례가 실효성과 적용성 측면에서 정비가 필요한 상태임. ○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현행화하고, 정기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범죄 예방 정책의 체계적 추진이 이뤄지도록 개선이 필요함.
세정과	개 선	<p>43.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관행적인 서면심사 운영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세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안건을 서면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 이는 위원회 본연의 심의 기능을 형해화하고, 중요 사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기회를 저해할 수 있음. ○ 따라서, 서면심사는 최소화하고, 중요하거나 논의가 필요한 안건은 원칙적으로 대면 회의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위원회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세정과	권 고	<p>44.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다양화 방안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운영 중인 일부 인센티브 외에도, 이자율(이율) 우대, 공공시설 이용 혜택, 포상 확대 등 다양한 방식의 우대 방안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성실납세자의 동기 부여와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제도적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할 것을 권고함.
세정과	권 고	<p>45. 향토기업 대상 발굴 및 감면기준 현실화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에는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대상 기업이 없는 상황으로, 향토기업을 발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향토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권고함.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징수과	권 고	<p>46. 고향사랑기부금 등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청년 및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등 주요 정책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 시, 획일적인 인적 구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세대와 전문성을 반영한 위원 구성이 필요함. ○ 향후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청년·전문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제도적·운영적 개선을 고려할 것을 권고함.
징수과	개 선	<p>47. 고액채납자에 대한 집중관리 및 지속적인 징수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액·다수의 지방세 채납자가 장기적으로 방치될 경우, 조세 정의 훼손 및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고액채납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실태 파악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강화해야 함. ○ 또한, 재산 추적, 행정제재, 채납처분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실효적 대응을 통해 고액채납 방지 및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도모할 것을 권고함.
정보통신과	권 고	<p>48. 시청 홈페이지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시청 홈페이지 및 관련 온라인 플랫폼이 여러 도메인으로 분산되어 있어 이용자 접근성 및 관리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이에, 분산된 도메인의 통폐합, 통합 플랫폼 구축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사용자 편의성 증대와 행정서비스 일원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인구청년과	권 고	<p>49. 인구 유입 정책의 실효성 재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입인구에 대한 경쟁적인 예산 퍼주기 정책을 통한 인근 타 지자체 인구 유입만으로는 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 ○ 이에, 일회성 유입정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과 중장기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인구청년과	권 고	<p>50. 관내 인구 증가 방안 적극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유입 대책 미비함. 전입 지원,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 인구 정책 마련 및 부서 간 협업 강화 필요함.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인구청년과	권 고	<p>51. 청년층 유출 방지 및 정착 유도 방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미愛주소갓기 관내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입하나, 졸업 후 80% 이상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음. ○ 이에, 졸업 후에도 구미시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유인책 마련 및 청년 정주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인구청년과	권 고	<p>52. 청년 정착 유도를 위한 일자리 정책 등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고용 기반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미흡함. 고임금 일자리 창출, 직무 역량 강화 지원, 주거·복지 연계 정책 등을 통해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함.
인구청년과	개 선	<p>5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각지대 해소 위한 보완책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보험 가입 불가 지역 거주자에 대한 지원 미흡함.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각지대 해소 위한 별도 보완 정책 마련 필요함.
인구청년과	시 정	<p>54.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재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정책 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사회적·행정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선심성으로 추진되면서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야기하는 사태가 발생함. ○ 이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책을 위한 정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인구청년과	개 선	<p>55. 청년의 날 행사 운영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의 날 행사는 과도한 행정 절차를 지양하고 청년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구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타시군의 어린이날 행사처럼 주인공이 직접 행사를 이끄는 참여형 행사 추진이 필요함.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인구청년과	권 고	<p>56. 인구청년 정책 적극 추진 및 홍보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제안 공모 심사에서 ‘기 시행 중인 사업’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국민제안이 불채택된 사례가 있음. ○ 이는 해당 사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 부족 또는 사업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던 점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사업의 개선 및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됨.
인구청년과	개 선	<p>57.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수요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주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미선정됨에 따라, 관내 면 단위 청년들의 요구 사항 및 현장의 불편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청년 마을 조성 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하여, 향후 공모사업 재신청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인구청년과	권 고	<p>58.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적극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확인됨. ○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인구청년과	권 고	<p>59. 청년의 날 예산 확대 및 완성도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미시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 청년의 날 행사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구미 청년들이 적극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과 함께 행사 기획 및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검토와 추진이 필요함.
인구청년과	시 정	<p>60. 면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적극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면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실정을 반영한 별도의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을 위해, 현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함.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아이돌봄과	개 선	<p>61. 아이돌봄지원사업과 어린이집 돌봄서비스 중복 문제 및 대응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지원사업과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일부가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확한 서비스 현황 파악이 필요하며, 중복 서비스로 인해 어린이집 감소가 초래될 경우 부모의 보육선택지가 줄어들음으로 인해 저출생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됨.
아이돌봄과	개 선	<p>62. 공무원 위주의 위원회 구성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의 대다수가 공무원 위원장으로 구성된 관 주도 위원회임. ○ 민관 협력과 시민 의견 수렴이 중요한 정책 결정 및 추진 과정에 있어, 이러한 구조는 부적합하므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아이돌봄과	시 정	<p>63. 우리동네 돌봄마을 조성 예산관련 정확한 이월 사유 기재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이월 사유를 상급기관 행정절차 지연으로 표기하였으나, 실제로는 구미시 추경 시기 지연이 주요 원인임. 의회 보고 자료에는 책임 회피성 표현을 지양하고, 사유를 사실에 근거해 정확히 작성할 필요가 있음.
아이돌봄과	시 정	<p>64.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운영 관련 조례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르면 아동복지전담 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구미시는 상위법 및 관련 지침만을 근거로 운영 중이며 별도의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법적 근거의 명확성과 제도적 정비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함.
아이돌봄과	시 정	<p>65.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비상연락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관련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24시간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체계 구축이 필요함.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아이돌봄과	권 고	<p>66. 장난감도서관 운영 효율화 및 이용 편의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약 시스템 고도화 등 이용자 중심의 운영체계 도입이 필요함.
아이돌봄과	권 고	<p>67. 공공화장실 내 아동 인식 개선 콘텐츠 활용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에게 상처 주는 100가지 말, 그림 게시’ 정책제안이 불채택되었으나,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동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콘텐츠 게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이돌봄과	권 고	<p>68. 시립어린이집 교직원 정원 조정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어린이집의 교직원 수가 어린이 인구 대비 과도한 경향이 있으며, 인구현황 및 추세 데이터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직원 정원의 탄력적 조정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방안 검토가 필요함.
아이돌봄과	개 선	<p>69. 사회복지시설 관리 부실에 대한 제재 방안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관리 부주의로 다수의 지적사항이 발생한 시설이 있음. ○ 반복적인 부실 운영 방지를 위해 시 차원의 강력한 경고 조치 및 행·재정적 페널티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마련이 필요함.
아이돌봄과	권 고	<p>70. 시립고아어린이집 노후 시설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고아어린이집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우천 시 누수 등 안전·위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영유아의 보호와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조속한 시설 정비가 필요함.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교육청소년과	개 선	<p>71. 도송중학교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 시 주민 및 학부모 의견 수렴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송중학교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위해 도량동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의견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교육청소년과	개 선	<p>72. 초등학교 진학 유예 학생 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급 부족이 진학 유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 정확한 실태 조사와 함께 학급 확충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통해 조기 대응 필요함.
교육청소년과	개 선	<p>73. 청소년 수련시설 연간 이용자 수 및 수요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수련시설의 연간 이용자 수 추이와 이용자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교육청소년과	시 정	<p>74. 산동중학교 통학로 개설공사 관련 안전 문제 및 청원 심의 절차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동중학교 통학로 개설공사가 추진되었음에도 시민들이 안전 확보에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청원이 접수됨. ○ 관련 기관 간 책임 전가를 지양하고, 시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 ○ 아울러, 해당 청원에 대해 청원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점은 절차적 미비로, 이를 개선하여야 함.
교육청소년과	시 정	<p>75. 청소년부모 지원 확대 및 방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부모에게 양육비 외에도 다양한 복지·교육·심리 등 다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지원 대상이나 신청자가 적다는 이유로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발굴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교육청소년과	권 고	<p>76.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확대 및 홍보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 규모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대상자 확대와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 강화도 병행되어야 함.
교육청소년과	개 선	<p>77. 과학영재교육원 사업 재활성화 방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영재교육원 사업 대상 인원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진학 시 가산점 폐지로 과학영재교육의 매력과 실효성이 저하된 데 기인함. ○ 이에 따라,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연계한 새로운 방향성과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의 재활성화를 위한 방안 검토가 필요함.
교육청소년과	시 정	<p>78. 교과연구활동 예산의 효율적 운용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연구활동 예산은 교육청 소관으로 판단되며, 지자체는 보조적 역할에 그치는 것이 타당함. ○ 이에 따라, 해당 예산을 학생 직접 지원 등 보다 시급하고 실효성 있는 분야로 전환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방안 검토가 필요함.
교육청소년과	개 선	<p>79. 「구미시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규정」 자치법규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상위법인 시행령과 일부 내용 불일치 확인됨. 법령체계 일관성 확보를 위해 조속한 자치법규 정비 필요함.
교육청소년과	권 고	<p>80. 학교밖 청소년 지원 다양화 및 적극적 정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밖 청소년은 기존 교육 체계에서 소외될 위험이 높아 사회적 취약계층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혜택을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함. ○ 이에 따른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추진하여 교육, 복지, 진로 등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학교밖 청소년의 자립 및 사회적 통합을 도모해야 함.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교육청소년과	권 고	<p>8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예산 지원 현황 및 수요를 면밀히 조사하여, 청소년들이 문화를 주도적으로 향유하고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교육청소년과	시 정	<p>82. 학생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통학로 관련 정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구미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시의 인식도 부족한 상황임. ○ 학부모 건의사항과 교육 관련 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함께,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과 균형 있는 시정 운영이 요구됨.
교육청소년과	시 정	<p>83. 신기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사업 조속한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교육청소년과	개 선	<p>84.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서면개최 관련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이 서면으로 개최된 사례가 있음. ○ 향후 불가피하게 서면개최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조례 또는 규정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교육청소년과	시 정	<p>85. 균형 있는 보조사업 운영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경비보조사업은 관련 조례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 교육경비보조사업 외에도 다양한 보조사업을 균형 있게 운영하여 시정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교육청소년과	권 고	<p>86. 구미지역교육행정협의회 구성 및 활성화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 운영 시 교육 관련 주요 기관 관계자들과의 원활한 협력과 소통을 위해 구미지역교육행정 협의회를 구성하고, 필요 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네트워크 운영 방안 검토가 필요함.
교육청소년과	권 고	<p>87.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 「구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를 폐지하거나, 현 부서의 사업 계획에 부합하도록 조례 및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교육청소년과 (가족정책과) (생활안정과)	개 선	<p>88. 교복지원사업 담합 방지 및 지원체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복지원 보편화 사업 시작과 동시에 교복비 담합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적극적인 감시 및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예산 낭비와 시민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함. ○ 또한, 보편 교복비 지원과 저소득 가정 지원의 중복수혜 금지 및 별도 신청 절차 운영은 신청 절차의 이원화로 시민 불편과 소외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간소화하는 등 지원체계의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함.
교육청소년과	권 고	<p>89. 스포츠대회 방문 학생 대상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추진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등으로 구미시를 방문하는 관외 학생들이 체류 기간 중 지역 관광을 경험하고, 재방문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교육청소년과	권 고	<p>90. 거점형 돌봄센터 ‘구미 놀품뜰’ 활용방안 사전 검토 및 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미 놀품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활용방안에 대한 상세한 계획과 철저한 사전 검토를 거쳐 구축해야 함.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교육청소년과	권 고	<p>91. 진학진로 지원센터 운영 총괄 역할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센터장은 총괄, 담당팀 직원은 지원 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나, 조직 체계 재정비가 필요함. ○ 담당과장이 직접 진학진로 지원센터를 총괄 관리하고, 센터장은 총괄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구조로 전환할 경우, 업무 효율성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교육청소년과	시 정	<p>92. 교육 서비스 질 향상 및 제도 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제도가 아이들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져야 하며, 교육기관은 보다 질 높은 교육 제공 의무가 있음. 교육청, 대학 등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시대 변화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 제도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족정책과	개 선	<p>93. 구미시 여성정책 고도화를 위한 체계적 자료 조사 및 분석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여성정책 수립을 위해 2030 여성포럼 등 다양한 시각에서 진행된 실태 조사와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21년 일·가정양립 실태조사를 비롯한 정책분석 결과물을 폭넓게 수집·분석하고, 이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경북도와 구미시의 성별격차 해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가족정책과	권 고	<p>94. 결혼 장려 프로그램 개인정보 수집 시 균형 있는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 장려 프로그램 운영 시, 신청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특성상 필수 정보 확인은 필요하나, 개인정보 수집 범위에 대한 균형 있는 조율과 세심한 관리가 요구됨.
가족정책과	권 고	<p>95. 결혼 장려 프로그램 신청자 성비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 장려 프로그램 추진 시 신청자 간 성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청 대상자의 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성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가족정책과	권 고	<p>96. 보편적 가족지원 정책 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부서 업무가 취약계층 위주의 지원사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나, 구미시민 전체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정책도 균형 있게 검토·추진할 필요가 있음.
가족정책과	권 고	<p>97. 결혼 장려 프로그램 추가 발굴 및 다양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근두근 ~ing’ 프로그램 참여자가 매칭에 실패할 경우, 재도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가족정책과 (생활안정과)	개 선	<p>98. 한부모가족 지원의 투명성 제고 및 부정수급 방지 방안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시 본인 확인 및 절차를 강화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예산이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 체계 마련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총무과	개 선	<p>99. 행정지원 분야 구미시정 성과평가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지원 부문의 역할과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미시정 성과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업무 지원의 질적 향상, 성과 기반의 인센티브 제공, 조직 내 책임성과 동기 부여 강화가 필요함.
총무과	개 선	<p>100.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에 대한 관심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자체 분담금으로 3천만 원을 납부하였으나, 경상북도 차원에서 어떤 사업이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확인과 관심이 부족한 실정임. ○ 향후에는 기금 사용 내역과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의견 개진 및 참여 방안 마련이 필요함.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총무과	시 정	101.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예산 집행 효율화 방안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집행잔액이 80%까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계획 부실 및 실행력 미흡에 기인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총무과	시 정	102.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시민 의견수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토론회나 공청회 등 시민 대상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한 실정임. ○ 향후 주민자치회 전환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공청회, 설명회, 주민 토론회 등 시민 참여 기반의 주민자치회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총무과	시 정	103. 구미시 인권보장 체계 정비 및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구미시 인권보장 조례가 발의되었으나, 후속 조치가 미흡한 상황임. ○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행정감사 자료 누락, 조례 담당자 연락처 정정 등 다각적 행정 보완이 필요함. ○ 특히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미설치와 행감자료 누락은 행정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속한 대응과 체계적 관리가 요구됨.
총무과	시 정	104. 조례 입법근거의 적정성 재검토 및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미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입법 근거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근거 규정을 재검토 하고, 타당한 입법 기반 위에서 조례 정비가 이루어져야 함.
총무과	시 정	105. 각 부서 기능 유지를 위한 조직 운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개편에 따라 새마을과의 새마을진흥팀과 자원봉사팀이 '새마을봉사팀'으로 통합되면서, 기존의 특화된 기능과 역할이 약화되고 있음. ○ 조직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수시적 인사계획 수립과 인력 배치의 적정성 확보가 필요함. ○ 아울러 조직개편 시 기능 축소 및 업무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총무과	시 정	<p>106. 문화선도산단 TF 신설 관련 조직 구성 및 인력계획 재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선도산단 TF 부서 신설 시, 2개 팀 체제로 업무 추진이 실제 가능한지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 사업의 범위, 추진 일정, 협업 대상 등을 고려한 기능 분석 및 업무 분장 검토를 통해 현실적인 조직 구성이 이루어져야 함. ○ 이에 따라, TF 신설에 따른 인력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필요 시 인력 보강 또는 조직 구조 조정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총무과	시 정	<p>107. 인력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기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동보건지소장의 경우, 채용 후 약 4개월 만에 휴직함에 따라, 대직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추가 채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예산 낭비가 발생함. ○ 이러한 인력운영의 비효율성은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직원 채용 시 중·장기적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휴직 가능성 등 인사 리스크를 사전에 고려한 인력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함.
총무과 (회계과)	권 고	<p>108. 청사 출입 편의 개선을 위한 자동문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 외부 출입문에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고령자, 장애인, 유아 동반자 등 이용 시민들의 출입에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시민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출입문 자동화 설비 설치가 필요함.
총무과	권 고	<p>109. 자율방범대 근무일지 서식 일원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자율방범대의 근무일지 작성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운영의 일관성 부족 및 자료 관리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 근무일지 서식 및 작성 기준을 표준화하여, 자료의 신뢰성과 행정관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총무과	시 정	<p>110. 구미시민의 날 제정 촉구 및 통합 행사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6월 제27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민의 날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나, 이후 1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추진이 미진한 상황임. ○ 현재 구미시 내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행사를 효과적으로 통합·운영하여 구미시민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는 '구미시민의 날'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총무과	권 고	111. 선거 투표소 지정 시 시민 편의성 최우선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 투표소 지정 시 최대 수용 인원과 예상 대기 시민 수를 충분히 반영하여, 투표소 장소를 선정해야 함. ○ 이를 통해 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과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
총무과 (미래도시전략과)	시 정	112. 도시경관팀 업무이관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개편 시, 도시건설국 건축디자인과와 미래도시전략과의 도시경관팀 업무를 통폐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함. ○ 이를 통해 도시경관 관련 부서와 미래도시전략 부서의의 기능을 각각 명확히 확립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함.
총무과	권 고	113. 위원회 사전자료 신속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개최 시, 심의 및 논의의 내실화를 위해 회의 자료를 사전에 배부하여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총무과	개 선	114. 전국·도 행사 성과 분석 체계화 및 인센티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및 도 단위 행사 유치 시 정량적·정성적 성과 분석과 결과보고를 철저히 수행하여 지역경제, 고용, 관광 등 파급 효과를 명확히 파악해야 함. ○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성과 우수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부서 사기 진작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총무과	권 고	11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집행의 적극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등 관련 예산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이용을 우선 고려함으로써 공공예산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총무과	시 정	<p>116. 반복적인 통합사례관리 가구 사후관리 미흡에 대한 읍·면·동장 엄중 문책 및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종합감사에서 동일한 ‘통합사례관리 가구 사후관리 소홀’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 ○ 이는 읍·면·동장의 책임감 부족과 교육·관리 감독의 심각한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당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책임 소재 명확화가 필요함. ○ 동시에 강력한 교육 시행과 재발 방지 위한 정기 점검 체계를 즉시 구축하여 행정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함.
총무과	시 정	<p>117. 사회복지 업무담당 공무원 복지수당 지급 및 인력 유지 방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근로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024 연도별 인건비 집행잔액이 44억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유사 직군 간 형평성 확보 및 인력 유지를 위해, 인건비 지급 기준 마련 및 중장기 인력 운영 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및 인건비 지급 지표 개선이 필요함.
총무과	개 선	<p>118. 선진지 견학 예산 산출 기준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부서에서 실시하는 선진지 견학과 관련하여, 단체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통일된 예산 산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인원 수, 견학 지역, 기간, 교통·숙박·식비 등의 항목별 표준 단가를 설정하여, 합리적이고 일관된 예산 편성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함.
총무과	권 고	<p>119. 차량등록사업소 근무인원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등록사업소 근무인원의 결원이 발생하여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민원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근무인원 확보를 하기 바람.
안전재난과 (정책기획과)	시 정	<p>120. 의회 안전 제출 시 신중성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안이 철회된 바 있으며, 이는 집행부와 의회 간 신뢰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 ○ 따라서 구미시장은 조례안 및 각종 안전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더욱 철저한 사전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한 신중을 기해야 하며, 불필요한 행정적 혼란과 신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됨.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안전재난과	시 정	<p>121. 구미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대상자 확대 검토 재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구미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의 대상자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따라 조례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보다 많은 재난취약계층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안전재난과	시 정	<p>122. 통합방위협의회 분기별 개최 의무 미이행 및 시장의 책임 강화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장은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반드시 개최하여야 하나, 최근 3년간 분기별 개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특히, 최근 국가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가운데, 구미시장이 통합방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시정을 운영하는 것은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 ○ 이에 시장은 통합방위협의회 분기별 개최 의무를 즉각 이행하고, 통합방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여 지역 안전과 시민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안전재난과	시 정	<p>123. 생명구조타올 비치장소 적정성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생명구조타올이 비치된 장소가 시민 접근성 및 긴급 대응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함. ○ 비치 장소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접근성 높은 장소로 재배치하거나 추가 비치를 추진하여야 함.
안전재난과	개 선	<p>124. 민방위 장비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장비의 노후화, 분실,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긴급 상황 대응력 저하 우려가 있음. ○ 민방위 장비의 보관 상태, 관리 체계, 정기 점검 여부 등에 대한 실태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 및 정기적인 점검·보수 계획 수립이 필요함.
안전재난과	시 정	<p>125. 호우 피해지역 데이터 분석 및 집중 대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연도 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피해 유형 및 취약 지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 이를 바탕으로 향후 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대책 및 대응계획을 집중적으로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안전재난과	시 정	<p>126. CCTV 설치 시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체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 설치 사업에서 업체별 단가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업체 분배 방식을 우선시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따라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가, 품질,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업체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분산 계약을 지양해야 함.
안전재난과	권 고	<p>127. CCTV 내구연한 종료 후 불용처리 등 행정 절차 철저 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 장비가 내구연한에 도달한 이후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불용처리 절차를 이행하여 장비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함. ○ 내구연한 종료 장비에 대한 정기 점검 및 불용처리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체계적인 기록 관리와 보고 체계를 강화해야 함.
안전재난과	시 정	<p>128. 연간 CCTV 설치 수요에 따른 신속한 설치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발생하는 CCTV 설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한 설치를 통해 시민 안전 강화 및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 설치 지연으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수요 관리와 신속한 사업 추진 체계 마련이 필요함.
안전재난과	시 정	<p>129. 재난응급복구활동 예산 명시이월의 재이월 관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응급복구활동에 편성된 예산이 명시이월된 후 재이월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예산 집행의 적시성과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재난복구 예산의 계획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명시이월 및 재이월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불필요한 예산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안전재난과	시 정	<p>130. 민방위 대피시설 정비 및 추가 지정·관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민방위 대피시설 167개소에 대한 정비가 미흡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대피 안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특히, 신축 아파트 등 다수가 이용 가능한 지하 주차장 등 잠재적 대피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와 지정,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이에 따라 민방위 대피시설의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최신 시설을 포함한 대피소 확대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함.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안전재난과	개 선	<p>131. 구미 시민안전보험 운영 내실화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지자체별로 보상한도 및 조건이 상이하므로,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지역 실정을 반영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안전재난과	시 정	<p>132. 입영지원금 지급 추진 및 예산 편성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2024년도 입영대상자가 2,500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미편성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기관은 예산 편성 등 구체적 재원 마련과 지급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안전재난과	권 고	<p>133.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지원 방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용소방대의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선진지 견학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견학 목적, 대상, 예산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형평성 있고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함.
안전재난과	시 정	<p>134. 공공야외시설 그늘지도 제작 및 안내체계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제안공모에서 그늘지도 제작이 불채택되었으나, 현재 공공야외시설에 대한 그늘 정보 안내가 전무한 실정임. ○ 시민 편의와 폭염 대응을 위해 그늘지도 제작의 보완 또는 대체 방안에 대한 행정적 검토와 실질적 추진이 필요함.
새마을과	권 고	<p>135. 박정희역사자료관 연계 특화사업 추진 방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정희역사자료관을 지역 정체성과 연계한 도시브랜딩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특화사업 추진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역사·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개발, 관광자원 연계, 지역 이미지 제고 등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사업 기획이 요구됨.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새마을과	시 정	<p>136. 새마을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 편성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유사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 새마을과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에 기반한 예산 편성을 통해 능동적 행정이 추진되어야 함.
새마을과	권 고	<p>137. 바르게살기협의회 연계 활성화 방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협업 기반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함. ○ 공동사업 추진, 프로그램 연계 등 실질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기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새마을과	권 고	<p>138. 자원봉사활동 안전관리 강화 및 교육지침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센터는 봉사활동 현장에서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와 사전 교육을 세심하게 추진해야 함. ○ 봉사자 대상 안전교육 지침을 체계적으로 마련·배부하여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안전한 봉사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새마을과	권 고	<p>139. 새마을 관련단체 선진지 견학 지원예산 적정 조정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 관련단체 선진지 견학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산의 적정성 검토 및 합리적 조정이 필요함. ○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해 견학 목적과 성과를 명확히 하고, 예산 편성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새마을과	권 고	<p>140. 「구미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실효성 및 폐지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미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의 운영 현황과 효과성을 면밀히 평가하여 실효성이 부족할 경우 폐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함. ○ 행정 자원 집중에 위해 조례 조정 또는 폐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새마을과	권 고	141. 박정회사진전 성과지표 관리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정회사진전의 효과적인 운영 및 평가를 위해 명확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 기반의 정기 보고 및 개선 방안 도출로 전시의 질적 향상과 시민 참여 증진을 도모하여야 함.
회계과	개 선	142. 소모품 예산편성의 단가 기준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모품 예산 편성 시 부서별로 기준이 상이하여 예산의 형평성과 집행의 효율성에 한계가 있음. ○ 품목별 단가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회계과	시 정	143. 청사환경개선사업 예산 집행 절차 준수 및 세부사업 분리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환경개선사업비를 조성공사와 도로파손 정비공사 등 세부사업을 통합해 포괄 편성·집행함으로써 의회의 명확한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은 절차상 문제임. ○ 이에 각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명확히 분리 편성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카페 조성 후 발생한 폐기물 방치 문제에 대해 철저한 현장 관리 및 후속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회계과	권 고	144. 미운영 중인 로봇주무관 안내 정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주무관 추락 파손 이후 운영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안내문이 여전히 게시되어 있어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 실제 미운영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문 철거 등 현장 안내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회계과	시 정	145. 수의계약의 공정성 제고 및 업체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 단가의 물품·용역 계약에 있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가가 유사한 경우 다양한 업체를 발굴하고, 계약을 합리적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회계과 (예산재정과)	시 정	<p>146. 결산 성과보고서 성과지표에 부서별 예산 집행을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잉여금 발생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계획성 부족을 나타내므로, 체계적인 원인 분석과 함께 예산 집행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개선 방안 중 하나로 하여야 함. ○ 또한, 집행을 제고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의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음.
회계과	시 정	<p>147. 수의계약 제한대상 검증 시스템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의계약 체결 시 제한대상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의무와 책임이 담당부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과 계약이 체결되는 문제가 발생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쉽게 확인할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회계과	권 고	<p>148. 구미시 청사 외벽 LED 전광판 및 전자현수막 설치 운영 정책 제안 심층 재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 외벽 LED 전광판 및 전자현수막 설치·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에 대해 비용 대비 효과, 운영 관리 방안, 시민 의견 수렴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통한 심층 재검토가 필요함.
회계과	권 고	<p>149. 소화기 위치표시 관리 실효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기 위치와 위치표시 스티커의 불일치 등 관리 부실이 확인됨. 재난 안전관리를 위해 정확한 위치 표시 체계 구축과 정기적 점검을 통한 관리 강화가 요구됨.
회계과	권 고	<p>150. 청사 재난대피도 현행화 미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 내 재난대피도가 현행화되어 있지 않아,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 유도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과 최신화 작업을 통해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공공시설과	권 고	<p>151. 에어돔 조성사업의 사업기간 관리 및 소통 강화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승인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완공하지 못할 경우 현재는 페널티가 없으나, 보조금법령등에 따라 환수조치가 가능할 수 있음. 사업기간 연장 사례가 빈번하므로 철저한 공사일정 관리가 필요하며, 주민공청회 개최 및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요구됨.
민원봉사과	개 선	<p>152.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의 법적 기준 미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 평가심의회에는 전문인 3명 이상을 포함해야 하나, 구미시는 2명만을 위촉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함.
민원봉사과	권 고	<p>153. 여권 발급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한 민원서비스 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 발급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어 민원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온라인 사전예약제 확대, 무인 키오스크 설치 등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복지정책과	개 선	<p>154. 법률홈닥터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합 방안 모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홈닥터 사업이 필요 사업임을 전제로, 타 부서에서 운영 중인 유사 법률자문 사업과의 결합 또는 연계를 통해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복지정책과	개 선	<p>155. 계선각 선행 기념 및 존중 프로그램 발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선각 선행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존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념 및 포상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여, 지역사회 내 선행 문화 확산과 존중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여야 함.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복지정책과	개 선	<p>156. 5차 구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내 부적합 사업 개선 및 수혜자 의견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기 부적절한 사업들이 일부 존재하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수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6차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기 바람.
복지정책과	권 고	<p>157. 참전수당 연령 제한 완화 도 협의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구미시는 참전수당 지급에 별도 연령 제한이 없으나, 경상북도에서는 6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음. ○ 이에 연령 제한 완화를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더불어 경상북도와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 노력이 요구됨.
복지정책과	권 고	<p>15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연계체계 구축 및 성과 홍보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과 구미시의 관련 정책 및 사업 간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 상호 협력과 시너지 창출을 위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됨. ○ 아울러 협의체 활동과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실행하여 주민의 이해도 제고 및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복지정책과	개 선	<p>159. 사회복지사 유급평가 지원 제도 운영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일환인 유급평가 지원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 ○ 집행기관은 관련 규정 점검 및 실태 관리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강화 필요함.
어르신복지과	개 선	<p>160. 고독사 예방 관련 조례 통합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와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간 기능 중복 우려 있으며, 조례 통합을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 필요함.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어르신복지과	개 선	161. 노인종합복지관 성과평가 지표 적정성 및 실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종합복지관 성과평가가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의 적정성 및 평가 절차의 합리성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함. 아울러 평가 결과가 기관 운영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으로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어르신복지과	개 선	162.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확인된 부족 부분에 대해 체계적인 개선 조치를 추진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어르신복지과	권 고	163. 미등록 경로당 지원 계획 철저 수립 및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준경로당 수준의 편안하고 쾌적한 여가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야 함.
어르신복지과	개 선	164. 공공건축물 건립 시 BF인증 절차 개선 및 제도 정비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건축물 건립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조기에 완료하여 공사 지연을 방지하고 예산 절감 및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강화 및 절차 개선이 필요함. 아울러 인증 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음.
어르신복지과	시 정	165. 구미추모공원 관리운영 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년 의회 동의를 통해 5년간 위탁 운영이 승인된 이후, 재위탁 동의 절차 없이 사업이 지속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향후 구미추모공원 관리운영 위탁에 대하여는 의회 동의 절차를 준수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주체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법적 정당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어르신복지과	시 정	166.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철저 ○ 지역봉사지도원 관련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원을 위촉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함.
어르신복지과	시 정	167. 경로당활성화사업수당 세부사업명 변경 ○ 세부사업 경로당활성화사업수당을 통해 편성목에서는 수당이 아닌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으므로 세부사업과 편성목이 불합치되어 세부사업명 수정이 필요함.
어르신복지과	시 정	168. 경로당 활동비 지급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경로당 활동비 지급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규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고 체계적인 법률 검토를 실시하여야 함.
어르신복지과	개 선	169. 경로당 운영 경비 개선을 통한 어르신 복지 향상 도모 ○ 시비를 통해 경로당 운영경비가 지급되고 있음에도 회원들을 통해 별도로 경비를 마련하는 경우가 있음. 어르신들은 경제적 활동이 어렵거나 수입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어르신복지과	시 정	170. 노인회 수당 지급에 대한 상위법 저촉여부 검토 ○ 노인회 지회장, 운영 본부장 등에 수당이 지원되고 있으나 수당이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음. ○ 저촉시 수당 환수 등 파급효과가 클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철저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어르신복지과	개 선	171.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대응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타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여 추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공문 발송 이후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음. ○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어르신복지과	권 고	172. 노인의 날 기념식 실비 자부담 문제 개선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의 날 기념식 관련 실비 자부담에 대한 대체 방안과 지원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 부담 경감 및 행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함.
어르신복지과	권 고	173.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관리 및 이행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조치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확인 및 보고가 필수적임. ○ 이를 통해 문제점의 반복 발생을 방지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안전한 운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함.
어르신복지과	권 고	174. 스마트경로당 공모사업 선정 역량 강화 및 적극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미시는 스마트경로당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체계적인 준비와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
어르신복지과	개 선	175.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세대 간 인식 차이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수적임. ○ 이를 통해 사업 본연의 목적 달성을 지원하고 가족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해야 함.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어르신복지과	개 선	176. 생활지원사 업무활동비 지급 및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지원사의 교통비, 통신요금 등 업무활동비를 면밀히 추산하여 추가경정예산에 신속히 반영하고,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생활지원사의 처우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생활지원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수혜기관이 직접 참여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운영해야 함.
어르신복지과	개 선	177. 스마트경로당 공모사업 선정 역량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경로당 공모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선정 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양방향 소통 가능 시스템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무료한 일상 해소와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어르신복지과	개 선	178. 노인복지시설 F등급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 수립 및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결과 F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해 원인 분석과 경북도 내 A등급을 받은 8개 지자체를 참고하여 문제점 해결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하며, 필요 시 직영 전환도 검토해야 함. ○ 아울러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강화가 요구됨.
장애인복지과	개 선	179. 휠체어 수리 의뢰 및 청구서류 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수리 관련 서류를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하고, 명확한 수리 의뢰서 및 청구서류 양식을 마련해야 함. ○ 이를 통해 수리센터의 과도한 수리 및 예산 요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장애인복지과	권 고	180. 구미직업재활센터 및 구미하랑재활센터 운영 효율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어,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과 비용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집행부는 이용자 중심의 예산 집행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합리적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함.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장애인복지과	개 선	181.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사업의 수요자 참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장애 유형별 특성 반영을 위해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수요자 및 민간단체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분석하고, 이를 사업 기획 및 실행 단계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됨.
장애인복지과	개 선	18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반 비상대응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사회재난 및 긴급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비상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행정복지센터와 복지시설 간 유기적 협력체계 방안을 마련하여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인 지원과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장애인복지과	개 선	183. 장애인 주간보호 종사자 지원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주간보호 종사자에 대한 유류비 등 별도 예산 편성과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며, 대체인력 사용횟수가 센터별로 크게 상이하니 읍·면 지역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형평성 있는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종사자의 근무 여건 향상을 위한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개선대책 수립이 요구됨.
장애인복지과	개 선	184.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점검 및 근무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장애인단기보호시설에 대한 정기적이고 철저한 지도·점검이 요구되며, 종사자에 대한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수요자인 이용 장애인 및 가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함.
생활안정과 (교육청소년과)	개 선	185. 청소년 교복비 지원사업의 일원화 및 조례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청소년 교복비 지원사업이 교육청소년과의 보편지원사업과 유사하게 이중 운영되고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부터는 한 부서에서 예산을 총괄 편성하고,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관련 조례의 폐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여야 함.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생활안정과	개 선	<p>186. 생계급여 지급의 신속한 집행 체계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급여가 매월 20일에 지급되고 있으나, 당일 오전 중 신속하게 수급자에게 입금되도록 사전 준비와 집행 일정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실질적인 생계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급 지연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평생학습원	시 정	<p>187.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운영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원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정보 전달이 불충분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 초래됨. ○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구성 및 정책 홍보방식 정비가 필요함.
평생학습원	시 정	<p>188. 평생학습 동아리 신청방식 재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동아리 신청 시 평생학습원에만 신청되고, 동아리 회장에게는 별도 전달되지 않아 운영 관리에 비효율 발생함. ○ 신청 정보가 동아리 회장에게도 즉시 공유될 수 있도록 신청방식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함.
평생학습원	시 정	<p>189. 교육강좌 수강료 사전면제 방식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수강료 선납 후 환급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 불편 초래됨. ○ 시민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전면제 방식으로의 전환 등 운영방식 개선 검토 필요함.
평생학습원	개 선	<p>190. 기업 및 직장인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및 직장인을 위한 평생학습 사업의 성과 창출과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기획과 개선 노력이 부족함. ○ 매년 동일한 예산과 유사한 사업만 반복 추진되고 있어, 대상 수요에 맞춘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과 추진 전략 마련 필요함.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평생학습원	시 정	191. 공사 하도급 지양 및 입찰방식 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이 반복되어 시의 직접적인 관리에 한계가 발생함. ○ 입찰 단계부터 공동이행방식 등을 통해 시에서 직접 계약·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평생학습원	권 고	192. 중장년층 및 노령층 디지털 문해력 향상 적극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된 중장년층 및 노령층 디지털 문해력 향상 방안 마련 촉구에 대해 성인문해교육 확대 및 학습자 참여 방안 검토를 답변하였으나, 단순 검토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조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됨.
평생학습원	권 고	193. 퇴직예정자 준비교육 및 재취업교육 관련 주민간담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된 퇴직예정자 준비교육 및 재취업교육 촉구에 대해 시민 학습욕구 충족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였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해당 사안을 주제로 한 주민간담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이 요구됨.
평생학습원	개 선	194. 구미시평생교육협의회 개최 철저 및 자치법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서면개최 근거가 없음에도 구미시평생교육협의회가 서면개최된 점에 대해 명확한 근거 제시와 행정절차 준수가 요구되며, 협의회 개최에 철저를 기해야 함. ○ 평생교육 관련 업무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상위법 개정과 시의 현황에 맞도록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함.
평생학습원	권 고	195. 주민주도형 인문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세대 간 전통 계승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유서 깊은 기술과 전통을 보유한 어르신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인문도시 조성사업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젊은층이 지역 전통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활성화하여야 함.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권 고	<p>196. 역사자료관 탐방사업 확대 방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아동 탐방사업과 관련하여 관내학교 및 학부모운영위원회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홍보가 필요함. ○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업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함.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권 고	<p>197. 기념품 품목 다양화 및 맞춤형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품 품목이 제한적이어서 연령대별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수혜자 특성을 고려한 품목 구성 등 맞춤형 제공을 통해 만족도 향상 및 행정 서비스 품질 제고가 필요함.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시 정	<p>198.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주차장 관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주차장이 대형차량 장기주차 등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해 주차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담당 부서의 책임감 있는 조치가 필요함.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권 고	<p>199. 박정희대통령 생가 관광자원 연계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정희대통령 생가 방문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근 상권 및 먹거리 등과의 연계 관광코스가 부족함. ○ 관광객 체류 시간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계 콘텐츠 개발 및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됨.
동 행정복지센터	권 고	<p>200. 세입예산 편성의 정확성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소관 세입예산 편성 시 실제 징수액과 편성액 간 차이가 커, 시 재정분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폐기물처리수수료 등 주요 세입 항목에 대해 철저한 추계 작업을 통해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동 행정복지센터	권 고	<p>201. 통장 임명 과정의 공정성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지역 통장 임명 시 공정한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특히, 2인 이상 후보자 경합 시 특정 후보에 대한 차별이나 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이 요구됨.
동 행정복지센터	권 고	<p>202. 기업체 기숙사 근로자 대상 ‘구미 주소 갖기 운동’ 적극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체 기숙사가 위치한 동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구미 주소 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인구 기반 확대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구미도시공사	시 정	<p>203. 종합감사계획 및 경영공시 자료 홈페이지 게시 의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감사계획 및 경영공시 자료가 타 사이트에만 게시되고 있으나,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구미도시공사 홈페이지에도 반드시 게시할 필요가 있음.
구미도시공사	시 정	<p>204. 안전관리 및 의약품 구입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 지적사항으로 안전관리 대행 및 의약품 구입 지급과 관련한 주의조치를 받은 바, 이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행정이 다소 안일하게 처리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됨. ○ 시민 안전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와 책임 있는 행정 집행이 요구됨.
구미도시공사	시 정	<p>205. 안전사고 발생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 안전 확보에 우려가 있음. ○ 안전관리자 배치 확대 등 구체적 안전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함.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구미도시공사	시 정	<p>206. 구미캠핑장 안전사고 예방 대책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미캠핑장 야간 운영 중 차량 속도 제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철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구미도시공사	시 정	<p>207. 시설안전 관련 문제의 신속한 시정 및 의회소통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미시 추모공원의 소방호스 미비와 옥성자연휴양림 데크 파손 등 시설안전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시정 조치가 요구됨. ○ 또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조치 결과에 대하여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함.
구미도시공사	시 정	<p>208. 구미도시공사 실버직 고용규정의 재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버직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부합하는 명확한 고용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현재 실버직 처우가 일반 기간제근로자 대비 열악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사측의 자의적 해석이 아닌 법적 근거에 근거한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관리 체계 수립과 운영이 요구됨.
구미도시공사	시 정	<p>209. 구미도시공사 홈페이지 재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들이 한눈에 알아보고 쉽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구미도시공사 홈페이지의 정보 제공 체계를 주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각 시설들의 기본적인 소개와 운영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총괄페이지가 있고 세부적인 사이트들이 개별적으로 있더라도 그래야함.
구미도시공사	권 고	<p>210. 공공헬스장 운영에 따른 갈등 해소방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헬스장 운영으로 인한 인근 스포츠업자영업자들의 경영 애로가 발생하고 있음. ○ 시민편의 제공이라는 공공가치와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균형 있게 고려한 해결 방안을 구미도시공사 차원에서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 노력과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구미도시공사	권 고	211. 공공수영장 이용자 우선선정 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수영장의 수요자 수에 비해 선정 인원이 적어 시민들이 예약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 ○ 특히, 질병을 가진 어르신들이 예약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우선예약 선정 기준 마련 등 배려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구미도시공사	권 고	212. 구미도시공사 SNS 홍보채널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미도시공사의 카카오톡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플랫폼을 활용하여 도시공사 및 추진사업에 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제공에 집중하고, 친구 추가 및 구독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실행할 필요가 있음.
구미도시공사	권 고	213. 구미도시공사 강사 수당 증액 및 처우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미도시공사 소속 강사의 수당이 낮아 강사 확보 및 근무 만족도에 어려움이 있음. ○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 증액과 함께 전반적인 근무 여건 개선 방안 검토가 요구됨.
구미도시공사	개 선	214. ‘클린아이’에 공개된 지방공기업 성별 평균임금 자료 대비 성별 평균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구체적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됨. ○ 공정하고 투명한 임금체계 구축을 통해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여야 함.
구미도시공사	개 선	215.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공정채용 실현 위한 예방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유관단체의 부정채용 방지를 위해 사후 조치에 그치지 않고, 사전 예방이 가능한 체계적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구미도시공사의 임직원 친인척 비정규직 채용 후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야 함.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구미도시공사	시 정	216. 수의계약 내역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의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의계약 내역을 구미도시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
구미도시공사	개 선	217.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체계적 정리 및 의회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실시하고, 조치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자료를 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음.
구미도시공사	개 선	218. 구미도시공사 경영평가 결과의 체계적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요 문제점 및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함. ○ 경영효율성 제고 및 조직 역량 강화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 추진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요구됨.
구미도시공사	권 고	219. 우수 구미도시공사인 선정 기준 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감사 과정에서 우수 구미도시공사인 선정 기준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평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구미도시공사	권 고	220.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종사자 고용안정 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정희스포츠센터의 위·수탁 추진과 관련하여, 기존 불링장 등 운영시설에서 근무 중인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이 우려됨. ○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인력 고용승계 및 처우 유지 방안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고용안정성과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철저한 대응이 요구됨.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구미도시공사 (어르신복지과)	시 정	<p>221. 구미추모공원 보수공사 추진체계 시정 및 관리 책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미추모공원은 구미시가 구미도시공사에 위탁 하여 운영 중이나, 시설 보수공사의 예산 편성·집행 및 공사 추진은 구미도시공사가 아닌 구미시가 주체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위탁시설에 대한 책임 있는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 집행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 이고 투명한 추진체계 마련이 요구됨.
전 부서 (정책기획과)	시 정	<p>222. 정책제안 공모 운영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제안 공모 운영계획 수립 시, 제안 채택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하고, 시민 참여에 책임 있게 응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며, 추진 전반에 걸쳐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야 함. ○ 정책제안의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신문고 답변이외에도 제안자의 노력을 존중하고, 사유에 대한 충분하고 성의 있는 설명과 안내를 제공 하여야 함.
전 부서 (정책기획과)	개 선	<p>223.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시의 정책 신뢰성과 행정 투명성의 기초가 되는 만큼, 작성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체계적인 검토 절차가 필요함. ○ 허위 또는 오류 기재로 인한 오해나 행정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최종 제출 전 검토 및 점검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전 부서 (정책기획과)	권 고	<p>224.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방식 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되는 자료는 연도별 현황 비교가 어려운 경우가 있음. 비교가 필요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 처리 건수만 기재 하는 것이 아닌 연도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하기 바람.

소관부서	처분구분	지 적 사 항
전 부서 (예산재정과)	시 정	<p>225.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산정의 정확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사업계획 수립 시 보고한 예산액과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예산이 과도하게 변동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의회의 판단이 어려워지고,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확실한 계획 수립과 예산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당초 계획과 예산이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면밀한 계획 수립과 정확한 예산의 산정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시정할 것.
전 부서 (회계과)	시 정	<p>226. 결산안 세입 부분 예산액 누락 시정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안 일반회계 세입 부분(기타수입, 지난년도 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의 관·항·목에 예산액 표시의 누락이 발생하였음. 결산안 작성 시 정확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정할 것. ○ 재산매각 수입 등 공유재산 매각액이 예산액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 각종 재산 매각으로 인한 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매각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시정할 것. ○ 폐기물 처리 수수료, 공유 수면 사용료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매년 발생하는 수입인 만큼 전년도 수입 추계를 반영하여 읍·면·동 예산에 편성할 것